

# 젊은세대의 시각에서 본 남북한 통일정책\*

—대학생들의 통일논의를 중심으로—

김 익 희\*\*

<目 次>

- |                   |          |
|-------------------|----------|
| I. 머리말            | IV. 통일방안 |
| II. 80년대 통일운동의 전개 | V. 맷음말   |
| III. 통일에 대한 기본인식  |          |

## I. 머리말

80년대 이후 대학생들은 대정부 민주화운동에서 뿐만 아니라, 지난해 여름 ‘남북학생회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통일문제에 있어 지금까지 ‘금기’로 되었던 ‘성역’들을 깨뜨리며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새로이 환기시키고, 정부의 공식 통일정책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축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고 대학생들이 앞으로 통일의 대업을 주도할 일주역이고, 또 현실적으로도 한국사회의 주요 정치·사회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통일에 대한 시각과 논의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통일정책의 국민적 합의기반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시사적인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현재 학생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운동권’에 속해 있는 학생들의 주장을 중심으로 하여, 젊은세대가 전개하고 있는 통일에 관한 논의의 일단을 파악, 이해하려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운동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그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공식 학생조직들에서 나온 문건들과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서서 통일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학생들의 글을 주로

\* 이 논문은 1989.5.29 서울대 문화관에서 열린 “남북한의 대내외 환경과 통일정책” 주제의 섭포지움에서 발표된 것임.

\*\* 서울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

참조하고, 부분적으로 대학생 대상 여론조사의 결과에도 주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글은 대상범위와 내용에 있어서 제한적 성격을 띠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하고, 학생들의 80년대 통일운동의 전개과정을 개략적으로 살펴 본 다음에, 이들의 통일에 대한 기본인식과 통일방안을 차례로 정리하고자 한다.

## Ⅱ. 80년대 통일운동의 전개

대학생들의 통일운동은 제2공화국하에서 폭발적으로 제기되었다가 80년대에 오면서 다시 활발하게 전개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생들은 자신들의 통일운동이 이전시대의 그것과 질적으로 상이하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그들은, 4·19 혁명 직후의 통일운동은 우선 통일 논의의 범국민화와 반외세 자주화·평화·민주 등 통일운동의 이념적 기초를 확립했으며, 관념적이고 선언적인 통일논의를 넘어 통일운동을 실천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일단 그것의 긍정적 의의를 찾는다. 그러면서 그 당시 한반도 분단의 근원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으로 통일운동의 방향을 정확히 세우지 못했고, 당시 중요한 통일방안으로서 제시된 중립화 방안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외세의 존적 통일관으로서 반외세·자주적 입장은 철저히 견지하기 못했다고 비판하고 있다(김진욱, 1988:150-151).

이어 학생들은 86년 10월의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 결성대회 투쟁’은 그 동안의 반외세반독재변혁운동의 이념적 본질적 성과를 기초로 하여 통일운동에 있어서 기본적 관점의 중대한 전환을 가져 왔다고 평가한다. 반미투쟁과 반공이데올로기 분쇄투쟁을 전면에 내세우며 전국적 학생조직을 건설하려 했던 ‘애학투 결성대회’는 수일간의 전국대 점거농성 사태로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나온 과격한 반미 반정부의 내용을 담은 성명서와 구호들, 참가자 전원에 대한 경찰의 대량연행 등으로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이때 배포된 ‘발족선언문’은,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분쇄하고 그 앞잡이 군부독재를 타도”한다는 투쟁목표를 전명했으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 촉진을 위한 투쟁선언문’에서는 “해방된 한민족을 총칼로 지배하고……민족의 분단을 만든 민족의 원수, 미제국주의자, 한반도의 남단을 식민지화하고……군사기지화를 확실히 관철시키기 위해 현하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과 교차승인이라는 영구분단의 음모를 보다 고도의 수법으로 진행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강신철 외, 1988:375, 378). 이후 “선도적인 정치투쟁 편향”으로 자체 평가·반성되기도 하는 이 ‘애학투 투쟁’에 대해 학생들은, 첫째로, 분단의 원인을 외세, 특히 미국의 한반도 분할지배로 바라봄으로써 분단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통일운동에의 진전을 가져왔으며, 둘째로, 통일운동은 바로 반외세반독재 변혁운동과 떼어놓을 수 없는 민족사적 과제이며, 통일운동의 귀결점은 완전한 민족자주성을 회복하여 통일자주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김진욱, 1988:151).

85년 말~86년 초부터 새로운 변혁이론으로서 한국사회변혁의 본질을 ‘민족해방운동’으로 규정하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변혁’(NLPDR. 이하 NLPD로 약함)론이 대두·확산되면서 이루어진 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이같은 인식상의 변화는, 요컨대 학생운동이 60년대 이래의 소박한 반독재투쟁에서 벗어나 한국사회 전체의 변혁과 미국의 실체 규명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광주항쟁이 갖는 역사적 의의에 대한 평가와 한국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정립을 계기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광주항쟁을 기점으로 하여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는 허구적인 모습이 여지없이 깨어지고 해방 이후 한국민중이 겪어야 했던 모든 억압과 고통의 주범으로써 각인되었고”, “한반도 민중의 자유로운 삶과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위해 필연적으로 극복해야 할 외세로서 ‘미국’을 인식하게 되었다”고 말하며(이광영, 1988:74), 남북분단의 원인과 분단 고착화에 대한 1차적 책임 역시, 냉전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미소간의 체제대립에서 그 원인을 찾는 기준의 전통적 견해를 부인하고, 미제국주의에 전적으로 돌리고 있다.

광주항쟁을 계기로 한 학생들의 반미의식은 82년의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과 강원대생들의 성조기 소각, 85년의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사건 등으로 표출되었는데, 85년까지만 해도 그것은 광주항쟁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묻고 미국이 한국의 독재정권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소박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86년 봄의 ‘반전 반핵 반미투쟁’, 5·3 인천사건, 10월의 ‘애학투 투쟁’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미제국주의 축출’이라는 철저한 반미구호를 전면에 내세우게 된다. 이들의 논리는,

미국이 한반도 분단의 원흉이며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어 제국주의적인 ‘경제수탈’을 자행하고 있고, “한국군을 제국주의 군대의 용병으로서 양키들의 총알받이화”하고 있으므로, “승미사대사상을 반미자주로 바꾸고 친미로 망한 나라를 반미로 되살리자”는 것이다(최문성, 1987:512). 미국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인식을 기초로 하여 이후 학생들의 통일운동은 ‘반제국주의 반미투쟁’의 성격을 다분히 띠면서 전개되어 나간다.

작년 6월과 8월에 학생들은 제 2 공화국 때를 연상케 하는 ‘남북한 청년학생 체육대회’와 ‘국토종단 순례대행전’을 제의하면서 남북학생회담을 주장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정부의 원천봉쇄에 맞서 대대적인 투쟁을 전개하여 사회에 ‘통일열기’를 가져다 주었다. 이 당시 학생들은 “수년의 투쟁경험 속에서 미제를 반대하고 몰아내는 투쟁을 전개하지 않는다면 민주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하에, 분단원흉과 반통일세력을 폭로하며 “철저한 반미반독재투쟁의 관점”에서 정부의 “통일사업 독점을 반대하며 6천만 민중이 주체되는 통일사업을 수행하고자 다각적 교류를 모색・실현하고자 하였다”고 말한다.<sup>1)</sup> 학생회담과 더불어 전개한 ‘공동올림픽쟁취투쟁’도 88 올림픽이 미국이 대한반도 지배를 영구화하기 위한 ‘2개의 한국’ 정책을 실현시키는 과정(분단올림픽 개최로 한국이 마치 독립된 국가인 것처럼 선전하여 국제사회에서 한반도에 두개의 국가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시키고, 이를 것을 교차승인, UN 동시가입으로 제도화하는 것)의 첫 단계란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이광영, 1988:80).

이의 연장선상에서 학생들은 금년 7.1~7.8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여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학생들은 반미 자주화운동의 발전에 신기원을 열어 놓고 연방제에 기초한 자주통일의 실현에서 결정적 국면을 마련한다는 올해 ‘구국운동의 기본좌표’를 밝히면서, ‘평양축전 참가 투쟁’의 승리로 반공반북제동을 분쇄하고 통일지향적 교류의 길을 터놓으며 민족의 합의로써 연방제 통일안을 쟁취할 것이라고 주장한다.<sup>2)</sup> 아울러 현 정세를 통일운동의 공세적 전진시기로 보고 ‘대중적 통일운동’의 확산을 꾀하고 있어, 학생들의 통일운동은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도 계속 활발하게 전

1) 전대협 「전체총회보고서」(1988. 8) 및 「서총련신문」(1988. 9. 6), 「흐름」(1988. 10 월호), pp. 95-102에서 제인용.

2) 내부유인물 “평양축전 결행방침”(1989. 4).

개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Ⅲ. 통일에 대한 기본인식

통일은 왜 해야 하는가? 통일의 이유를 묻는 이 질문에 대해 ‘운동권’을 포함한 일반학생들 대다수가 한편으로는 통일을 민족적 당위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또 한편으론 분단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모순과 비리, 분단의 제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실용주의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서울대 총학생회 산하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조통특위)가 88년 4월 서울대생 7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민족통일의 절박함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해 “한 민족 한핏줄이라는 당위적 차원에서 통일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5.49%였고, “분단으로 인한 군사적 대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발전을 제약하고 있으므로”에 대한 응답율은 45.27%였다.<sup>3)</sup>

구체적으로, 통일이 우리에게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가 되는 이유를 한 학생운동가는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정리하고 있다(김영환, 1987:51-54). 즉, 통일은 (1) 우리에게 전쟁과 공포, 핵참화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 (2)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민족자주를 완성시킨다 (3)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화하여 민중의 자유를 더욱 확대시킨다 (4) 남북한의 엄청난 군사비 지출과 군무인력을 줄여 경제발전과 민중복리에 사용할 수 있다 (5) 군사비를 대폭 삭감하더라도 남북대치상태가 해소되기 때문에 국방력을 배증 시킬 수 있다 (6) 지금까지의 결름발이 외교, 경쟁적 출혈외교를 종식시키고 완전한 외교적 권리행사를 행사한다 (7) 남북한의 경제적 약점을 보완하여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보장한다 (8) 남북간의 문화적 협력과 보완을 통해 문화의 비약적 발전을 보장한다 (9) 단일민족으로서의 동질성을 회복한다 (10) 1,000만 이산가족의 세기적 숙원을 해결한다는 이유를 열거한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극단적으로 갈 경우 어떠한 형태의 통일도 모두 좋다는 식의 통일지상론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점이 지적될

3) “서울대 조통특위 설문조사 결과”, 국토통일원, 「민간차원의 통일운동과 남북 교류: 쟌야 및 운동권의 통일논의자료」(1988.10), p.220.

수 있겠지만, 현재 주·객관적으로 구조화·내면화되어 있는 분단상황을 고려한다면 통일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분단극복의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인식은 한국사회의 성격과 민중변혁에 관한 입장의 차이에 따라 학생들간에 상이하게 나타난다. 학생운동권의 변혁논리는 그동안 80년 이래 85년의 ‘사회구성체 논쟁’을 거치면서 내부의 치열한 이론투쟁과 실천적 경험을 통해 보다 체계화되어 왔으며, 변혁의 성격과 전략전술 등 제측면에서 분파간에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다. 현재 운동권은 NL계와 CA(제헌의회)계로 대별지울 수 있다.<sup>4)</sup> 여기서는 이들 양파의 입장을 통일문제에 국한시켜 간략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학생들에게 광범하게 확산되어 있고, 공식 학생대표기구를 통해 학생운동 및 통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NL계는 한국의 정치체제를 미국의 군사강점을 배경으로 수립된 ‘신식민주적 대리통치체제’이며, 매판자본가와 지주 및 반동관료배와 같은 매판적이고 친미적인 반동계급의 이익을 옹호 대변하는 ‘매판파소독재체제’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체제는 기본 생산수단이 미국을 위시한 외국독점자본과 매판세력의 수중에 장악된 ‘식민지적 성격’, 농촌의 봉건적 소작제가 온존되어 있고 자본주의 그 자체도 매판성과 접근성을 띤 ‘반(牛) 자본주의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식민지 반자본주의적 경제체제’라고 파악한다.<sup>5)</sup> 나아가 이들은 “한국변혁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민족해방운동이다”라는 명제에 입각하여, 한국사회 변혁의 성격은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변혁’이고, 그 주된 대상은 ‘미제 침략세력’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국사회의 대립관계에 관해서는 주되는 측면과 부차적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주되는 측면은 미제와 한국민중(노동자,

4) 「한신학보」자료집(1986~1987), 「변혁논단 : 을마른 입장정립을 위하여」, pp. 1-9 및 강신철 외, 앞의 책 참조. NL계와 CA계 역시 내부적으로 각각 NL ‘주사파’(주체사상파)와 ‘비주사파’, CA ‘다수파’와 ‘소수파’ 등으로 갈라져 있다고 한다. 특히 CA ‘다수파’는 NL계의 노선을 적극 수용하는 전영파 CA의 기본입장을 유지하면서 ‘반제 반독점’의 과제를 강조하는 PD(민중민주주의)계로 양분된 결과, 학생운동권은 최근 NL계와 PD계로 크게 대립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이러한 대립구도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NL계와 CA 계 각각의 기본노선은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이 양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5) 「민족해방의 진로」(1988, 봄 ?), pp. 110-119. 이하 NL계 입장은 주로 이 소책자의 내용에 근거함.

농민, 청년 학생, 지식인, 도시 소자산 계급, 애국적 민족자본가와 군인, 양심적 종교인 등 ‘자주성을 유린당하는’ 세력)간의 관계로서, 여기서 제국주의의 식민지 통치를 척결하고 사회의 자주화를 실현해야 할 ‘반제민족해방의 임무’, ‘자주화’의 과제가 제기된다. 부차적인 측면은 미제의 주구세력인 매관자본가, 친미지주, 반동관료배들과 민중 사이의 관계로서, 여기서 파쇼통치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해야 할 ‘민주주의적 임무’, ‘민주화’의 과제가 제기된다고 한다. 아울러 한국에서의 사회변혁운동은 민족이 분열되고 국토가 양단된 나라의 절반 땅에서 수행되는 까닭에, 변혁운동은 앞의 두 임무와 더불어 ‘조국통일임무’도 갖게 된다고 말한다. 이들 세 임무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국통일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는 문제로 규정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차원의 임무로서 상정되지만, 전략전술의 차원에서 볼 때, ‘반미자주화투쟁’이 가장 중심이 되는 주축이고, 나머지 두 임무를 위한 투쟁은 보조축으로서 ‘반미자주화 투쟁’을 확장시키고 고양시키는 공간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반미자주화 투쟁’을 올바로 수행함에 의해서만 ‘반파쇼민주화 투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조국통일촉진운동)을 올바르게 견인하고 주된 적(미국)에게로 투쟁을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sup>6)</sup>

이들은 나아가 한국민중이 투쟁을 통해 수립할 정권은 ‘민족자주정권’이라고 하고, 이 정권은 모든 사회구성원, 즉 극소수의 친미사대매국세력을 제외한 전민족의 요구와 이익을옹호하고 대변하는 정권이며, 모든 계급계층과 사회세력을 총망라하는 ‘민족통일전선’을 정치적 기반으로 갖는다고 말한다. 이 ‘민족자주정권’은 자주·민주·통일을 정책기조로 삼아, 미제의 식민지 통치의 잔재청산과 반제·민주주의적인 사회경제개혁을 실시하고, 동시에 자주적 평화통일의 소지를 마련해야 할 임무를 떤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민족자주정권’은 통일논의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광범위한 민중이 민족통일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고, 반공대결체제에 기초한 제도적인 분열체제를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에 기초한 통일체제를 정립함으로써,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NL계와 대립관계에 있는 CA계는, 분단구조하의 한국사회 성격을,

6) 「지금 시기 우리들의 전술적 임무에 대하여」(1986. 5. 30), p. 4.

구식민지의 직접지배로부터 신식민지 간접지배로 후퇴한 제국주의의 전략변화를 강조하면서, 국내의 예속적 자본주의 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사회’(혹은 ‘예속국가독점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한다. 그리고 당면변혁의 성격을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의 수호기제인 예속적 파쇼권력을 타도하고 제국주의를 축출하는 ‘반제반파쇼민족민주변혁’(NDR)으로 집약시키고 있다.<sup>7)</sup> 이들은 한국의 군사파쇼정권이 제국주의와의 관계에서 상대적 독자성을 갖고 있고, 한국사회의 기본모순은 노자간의 모순이고 주요모순은 군사파쇼독재와 민중간의 모순이라고 파악하는 입장에서 ‘반파쇼민주화’와 계급투쟁에 최대의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다가 최근 신식민지 단계에서 나타나는 제국주의 지배의 총체성(정치적·군사적 지배의 측면까지 포함)을 강조하면서, 한국사회의 당면변혁의 내용으로 한 국의 국가를 장악·재편하는 반파쇼의 과제와 제국주의의 축출이라는 과제를 병렬적으로 함께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까닭에 이들은 원래 통일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가, 최근 반제의 성격을 갖는 통일운동에도 찬성하고 있는데 상대적 우위성을 여전히 ‘반파쇼민주화’에 두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신식민사회인 남한민중의 민족해방투쟁이 진보적인 것처럼 민족통일과 민족해방과 노동자계급 민주주의는 남한혁명에 있어서 떨어질 수 없는 세 측면이다”라고 말하고 있다.<sup>8)</sup> 나아가 분단이 한국사회의 변혁 뿐만 아니라 북한사회의 사회주의 건설 또한 방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통일의 필요성을 남북한 전민중의 “반제공동전선”的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통일운동을 한국사회의 변혁(‘반제반파쇼’)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부문운동으로 유치시키는 한계점을 지적받는다. 이와 같은 지적은, 이들이 통일의 실현을 한국사회에서 변혁이 성취된 이후에야 가능한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데서 기인하는데, 예컨대 한국사회의 단위를 넘어서는 차원의 통일운동이 현실적 의미를 가지기 어렵기 때문에 현단계에서는 통일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폭로해내고 한국사회의 변혁에 기여하는 한에서만 통일운동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변혁의 과제인 ‘반제반파쇼’를 일정하게 성취해 낸 후 ‘임시혁명정부’를 구성하고, 이 ‘임

7) “CA의 정치노선”, 「팜플렛 정치노선」(서울: 일송정, 1988), pp. 81-171. CA체의 입장에 관해서는, 조형제, “국가론의 관점에서 본 분단과 통일의 문제”, 「경제와 사회」, 창간호 (1988, 가을), pp. 60-62도 참조함.

8) “CA의 정치노선”, p. 169.

시혁명정부'가 '제헌의회'를 소집하여 한국 단독의 지역적 한계를 가진 '민주주의민중공화국'을 건설할 업무를 담당한다고 말한다. 이들의 변혁경로는 '파쇼타도→미제축출→임시혁명정부→제헌의회→민주주의민중공화국'으로 짐약된다.

NL계나 CA계 중 어떠한 입장에서 있든지 간에, 학생들은 통일문제의 본질을 외래 제국주의와 한국 민중간의 민족문제로 파악하고, 그것이 전제 한국사회의 변혁운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데 대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이들은 분단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 즉 분단은 현상적으로 남북한 체제의 대립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적인 역관계에 있어서 '한반도의 분단을 통하여 남한을 지배하고자 하는 미국과 민족내부의 반민족적 분단 지향 세력, 반통일 세력'과 한반도 민중들을 주체로 하는 통일지향세력 간의 '민족모순'이라고 규정하고, 통일문제를 무엇보다도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는 민족자주권 회복의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머물지 않고 학생들은 통일의 문제를 보다 광범한 범위에서 이해한다. 예컨대 통일은 민족자주권 회복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중의 생존과 민주주의적 제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진정한 민주화의 문제,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분단의식 극복과 민족동질성 회복의 문제, 불신과 대립을 해소하고 통일조국을 건설하는 민족대단결의 문제, 군사적 대치상태 해소와 긴장완화, 한반도에서의 전쟁의 위험을 완전히 없애는 평화의 문제, 민중이 변혁의 주체로서 이 땅의 주인으로서 자리잡는 문제, '멸공'이나 '승공'처럼 누가 먹고 먹히는 문제가 아니라, 본래 통일되어 있던 한 민족이 제국주의의 명에에서 완전히 벗어나 통일을 이룩하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이광영, 1988:79-80).

통일문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은 정부의 현행 통일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한다. 통일에 대한 '체제우선론적 통일론'이나 '기능주의적 접근'을 모두 '두개의 한국 책동, 영구분단음모'라고 비판하고, 통일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전제로서 (1) 모든 양심수의 식방 (2) 허구적 민간교류와 상호방문, 상호교역이 실질화되기 위한 제도적 법적조치로서 국가보안법과 사회안전법 철폐 (3)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상호군비감소, 핵무기와 미군철수, 침략적 군사훈련(팀스피리트) 중지, 반공국시 철폐 (4) 자주적 민간교류 보장 (5) 자유로운 통일논의의 보장,

북한자료의 전면공개 등을 제시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88년의 ‘7.7선언’은 “미봉적 전시효과에 불과한 제스처”이며, 본질적으로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오던 남북한 교차승인, 유엔동시 가입’이라고 하는 한반도내 2개의 한국 정책, 즉 영구분단화 정책이라고 비판한다.<sup>9)</sup> 아울러 ‘10·18 유엔연설’에서 제안된 ‘동북아 6개국 평화협의회의’도 동북아의 평화문제를 협의한다는 구실하에 남북한과 미·일·중·소라는 4대강국을 협상테이블에 모아 교차승인 실현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다(김학우, 1989:42).

그러면 ‘운동권’의 소속유무에 관계없이 일반 대학생들은 통일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이를 보기 위해 기존에 나와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잠시 살펴 보고자 한다. 먼저 현대사회연구소가 87년 5.26~6.5일에 걸쳐 전국 37개대 3,4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생의 이념정향 조사연구”에 따르면,<sup>10)</sup> 해방직후 “남북분단의 책임이 미국의 정책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는 응답이 31.1%, “약간 동의한다”가 54.7%로서 전체 응답자의 85.8%가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민족통일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주된 책임이 미국, 소련, 한국, 북한 중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미국에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9.5%로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북한(26.5%), 한국(24.7%), 소련(7.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8·15 해방 후 미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으로 들어와 신식민지 파쇼를 구축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15.8%, “약간 동의한다”가 39.7%로서 54.9%가 동의한 반면, 이러한 주장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17.1%에 불과하고 있다(나머지 27.5%는 “그저 그렇다”고 답함). ‘운동권’ 학생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과 크게 차이가 없는 이 조사결과를 볼 때, ‘운동권’의 반미논리가 일반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폭넓게 공유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88년 4월 전대협 ‘조국통일학생추진위원회’

9) “7월 7일 노태우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발표에 대한 전대협의 입장”, 국토통일원, 「민간차원의 통일운동과 번복교류」, pp.183-185.

10) 현대사회연구소 연구 조사보고자료, “대학생의 현대사 인식과 의식화 정도: 대학생의 이념정향 조사연구에 관한 분석자료”, 「현대사회」, 1988년 여름호 pp. 114-129.

가 전국 65개대 12,4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sup>11)</sup> “조국분단의 결정적 원인”으로서 “미군의 남한 점령”과 “소련의 북한점령” 때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6.8%, 4.1%이고, “미국과 소련군의 남북한 분할강점”이 67.8%이며, “해방후 국내 좌우익의 대립”이라는 민족 내부요인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불과 13.6%에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분단의 원인을 외세의 이해관계 속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통일의 최대장애요인으로는 “남북한의 체제상의 대립”이 37.7%로서 가장 많긴 하나, “남한내의 독재정권과 미국” 때문이라는 응답 또한 33.5%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으로는 “외세로부터의 자주권 회복”이 36.4%로서 수위이고, 이외에 “남북한 군사력 대치의 해소와 평화협정의 체결”이 19.8%, “남북한 민간부분 교류”가 18.8%, “정치적 민주화의 달성”이 17.1%순으로 나타난다. 통일정책에 관해서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주변 강대국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0.4%(지지한다는 응답은 33%)이고, 반대하는 이유로는 “남북한 분단현실유지”(43.5%), “남한내 민주정부수립의 일차적 선행”(16.9%)을 들고 있다. 끝으로 국시로는 “통일국시”(71.5%)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반공국시”(26.8%)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다.

비록 설문조사에 기본적 한계(설문지구성, 조사기술상의 문제 등)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학생들의 통일문제인식은 일반국민들의 그것과 상당한 편차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일반국민들은 “이념 및 사상대립”(45.9%)과 “정치지도자들의 이해대립”(16.9%) 등 전체 응답자의 62.8%가 민족내부적 요인을 들고, 불과 19.6%만이 “주변 강대국의 이해갈등” 때문이라는 응답을 하고 있다(동아일보, 1988. 6. 16). 또 다른 조사에서도, “사상·체제대립”(28.1%), “상호불신”(16.1%), “남북한 지도자들의 무성의”(8.8%) 등 내부요인을 지적한 비율이 53%이고, “강대국의 이해관계 대립”은 22.2%에 머물고 있다(동아일보, 1988. 8. 24).

11) 전대협, “조국통일을 위한 청년 학도 설문조사 분석”, 국토통일원, 「민간차원의 통일운동과 남북교류」, pp. 211-219.

#### IV. 통일방안

학생들은 통일의 기본원칙으로서 1972년 7월 14일 남북간에 최초로 합의된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3대원칙인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의 원칙을 전폭 지지하고 있다. 비록 당시 남북한 접촉과정상의 비밀성과 민중배제성, 또는 동기상의 문제(예컨대 공동성명은 “베트남 전쟁으로 한국에서의 긴장을 원치 않았던 미국과 이에 놀아난 박정권이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회색시키고자 민족적 요구에 못이겨 그냥 한번 해본 소리, 속임수에 불과했다”(김진욱, 1988:148)에 대한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은 남북공동성명을 “우리 국민에게는 소중한 조국통일의 지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하여 (1) 자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외세인 미국은 휴전당사자로서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철수할 것 (2) 평화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자주권 회복(한미 상호방위조약 폐기, 군작전지휘권 반환), 남북 한간의 불가침선언과 상호감군 군비축소 (3)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반북 반공정책과 국가보안법 철폐,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남북교류 등을 요구하고 있다.<sup>12)</sup>

이러한 3대 기본원칙에 입각해 학생들은 어떠한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아직 하나로 집약된 형태의 구체적인 단일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대체로 연방제통일안에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 실현과정에 있어서는 역시 변혁입장에 따라 견해를 달리한다.

먼저 NL계에서는, 남북의 어느 일방이 주도권을 행사해서 타방을 흡수한다는 논리는 민족적 성격을 띠는 통일문제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에 절대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적 여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조국통일의 실현방도는 ‘통일연방국가’를 창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통일연방국가’는 남북이 서로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쌍방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하고, 그 밑에서 남북이 각각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지역자치

---

12) 서울대총학생회 조통특위, “7.4 남북공동성명 16돌을 맞이하여”, 국토통일원 「민간차원의 통일운동」, pp. 202-204.

제를 실시하는 연방제를 의미한다고 한다.<sup>13)</sup> 그리고 이들은 ‘통일연방국가’의 창립은 북에 이미 사회주의적 ‘민족자주정권’이 서있는 조건에서 남한에서 ‘민족자주정권’이 수립될 때 성공리에 실현될 수 있고, 통일의 주체 또한 한 북의 민중이 이미 자주적인 주체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민중이 민족자주사상에 의해 의식화 조직화되어 자주적인 주체로 될 때 용이하게 성취될 수 있다고 말하며, 남과 북, 해외의 모든 애국역량이 사상과 제도를 초월해 ‘민족대통일전선’을 형성할 것을 주장한다.<sup>14)</sup>

CA계 역시 연방제 통일안에 찬성한다.<sup>15)</sup> 이들은 북한이 사회주의 사회이고 한국이 NDR을 추진 중에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경과 외교 일체를 단일한 행정체제로 재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와 같은 완벽한 통일이 가능해지려면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가 폐절되고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NDR의 과정에서 실현할 수 있는 최대한의 통일방식은 연방제통일이라고 주장하고, 통일국가의 형태로서 ‘민주주의연방민중공화국’을 상정한다. 이 ‘연방민중공화국’은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국가로 대표되고, 대내적으로 지역적 차치를 실시하는 권력구조를 갖추게 된다고 한다. 이들은 나아가 통일을 보다 완전하게 실현하는 일은 NDR을 사회주의 혁명으로까지 성장·진화시켜 나감으로써 실제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의 주체는 북한의 프롤레타리아트와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한국의 프롤레타리아트라고 말한다.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을 보면, 한국에서 먼저 ‘임시혁명정부’를 수립한 다음, ‘제헌의회’를 소집하여 ‘민주주의민중공화국’을 수립하고, 이 공화국이 북한과 통일을 추진하여 ‘연방민주공화국’을 수립한다고 한다.

친북 일변도적인 이러한 통일안 이외에, 학생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어 비교적 실천가능성이 높은 방안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는 NL계 학생운동가 김영환이 87년에 내놓은 연방제통일안을 살펴보자(김영환, 1987:50-65). 그의 통일안은 앞에서 본 통일안과 비교해 연방제통일안의 이유와 이의 추진과정, 연방정부의 운영에 관해 비교적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그는 먼저 남북한 중 어느 한쪽의 체제를 강요한 통일은 대소규모의 유혈충돌을 불가피하

13) 「민족해방의 전로」, p. 149.

14) 같은 책, pp. 149-150.

15) “CA의 정치노선”, 「팜플렛 정치노선」, pp. 169-171.

게 하고, ‘북한화 통일’이나 ‘남한화 통일’에 대해 심한 공포의식을 갖고 있는 많은 남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통일을 기피하게 만들며, 경제를 큰 혼란과 침체에 빠뜨리기 때문에, 연방제통일안은 오늘날 ‘최선의’ 평화통일방안이 아니라 ‘유일한’ 평화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그가 제의하는 통일안의 내용과 추진단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정부의 ‘국가주권선언’ 선포(미국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악용방지) (2) 남북한 ‘민족평화선언’ 채택(의국군 철수와 군비축소, 7·4 공동성명에 입각한 평화통일 실현 천명), ‘남북상호불가침협정’ 체결 (3) 남북한·미국대표간 평화회담 개최 (4) 휴전협정 폐기, 한국군·조선인민군·미군간 ‘평화협정’ 체결 (5) ‘평화협정’ 이행(군비축소, 미군철수, 핵무기 철거, 비정규무력 폐지, 한·미군사동맹 해체, 군사상호원조 조약 폐기) (6) 중립국 잠시위원회를 구성하여 ‘평화협정’ 이행 감시 (7) 남북연명의 ‘중립화선언’ 채택 (8) 남북주민의 교환홍보활동을 통한 상호신뢰 증대 (9) 남북한 정당, 사회단체 대표의 상호방문, 민간차원의 교류수행 (10) 민주적 선거에 의해 선출된 남북한 동수의 대표들과 해외교포대표에 의한 연방헌법과 국호제정, 단일국호하의 유엔가입 등. 그리고 이어 국방, 외교, 정치, 경제 등 제분야에서의 통일연방정부의 운영원칙들을 열거하고 있다. 김영환의 이 연방제통일안은 학생권에서는 보기 드물게 ‘구체적’이고, 통일 국가의 미래상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연방안 자체가 한국사회변혁의 대상이 되는 체제의 지배세력이 북한과의 교섭담당자가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의 통일안은, 앞에서 살펴 본 NL계의 기본입장을 전제로 하여 제시된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점은 예컨대, 통일에 있어서의 대전제는 ‘민주화’라고 하면서, ‘에속독재정권’이 존속하는 한 결코 통일을 바랄 수 없기 때문에, 그 정권에 대해서는 환상을 품어서도 안되고, 방심을 해서도 안되어,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3불원칙’(三不原則)을 제기하고,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도 절대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그의 언명에서도 나타난다(김영환, 1987:59).

그 구체적 내용과 실현방도가 어떠하든, 연방제통일안에 대한 지지는 ‘운동권’ 뿐만 아니라 일반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폭넓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총학생회 ‘조통특위’의 설문조사(‘88.4) 결과에 따르면 연방제 통일 방안에 대한 지지도가 49.87%를 차지해 수위이고, 그 다음이

“제 3의 통일방안(27.57%)”,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17.54%)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sup>16)</sup> 통일에 대한 염원과 체제공존의 잠정적 불가피성을 결충하는 연방제통일안에 대한 학생들의 지지가 높음을 알 수가 있다. 더우기 앞에서 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구국운동’의 기본좌표를 반미구국과 자주통일 운동으로 설정하고, 통일운동의 목표를 민족적 합의에 의한 연방제통일안 쟁취에 두고 있는 것을 볼 때,<sup>17)</sup> 학생들의 연방제통일안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앞으로 계속 증대될 전망이라고 하겠다.

## V. 맷 음 말

대학생들의 통일논의 전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는, 그것이 전개되어 온 역사적 맥락, 남북한 당국의 통일정책사, 그리고 야당과 재야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통일논의들과의 포괄적인 비교고찰에 의해 가능할 것이라고 할 때, 이 글의 내용은 극히 단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정적으로나마 학생들의 통일논의가 갖고 있는 특성을 찾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 학생들은 우선 한반도의 분단과 이의 고착과정은 우리 민족의 의사에 무관하고, 이질적인 이념·체제간의 냉전적 대결이 아니라 그 주된 책임이 외세, 특히 미국 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정책에 있다고 보며, 분단상황하의 한국사회 역시 미국 제국주의의 요구와 논리에봉사하는 (신)식민지사회로 이해한다. 이와 같은 인식은 학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시각과 논의를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방향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요컨대 통일은 미제국주의로부터 민족자주성을 회복하는 ‘민족해방’의 문제라는 데 그 본질이 있고, 미국에 예속되어 민중을 억압하는 현정권은 변혁의 대상으로서 통일의 실질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통일에 앞서 혹은 이와 동시에 한국社会의 민주변혁을 도모하여 민중을 동력으로 하는 통일을 추진한다는 현상태파적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분단 40년이 넘으면서 남북한 각각 분단으로 인한 군사적 위협을 권력의 큰 정당성의 명분으로 삼는 상이한 체제가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맞

16) “서울대 조통특위 설문조사 결과”, pp. 223-224.

17) “평양축전 결행 방침”.

물러 고착화하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일반국민들의 이념적 보수성과 현상유지의 사회심리적 경향을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현단계에서 다분히 급진적이고 이념적인 속성을 강하게 떤 것이라고 하겠다. 4·19 혁명 이래 학생들의 통일논의와 운동이 역대정권의 반공반북이데올로기의 의한 탄압에 맞서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일깨우고 정부 통일정책의 폭을 넓히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실천 가능한 통일대안의 형성과 집행은 진공상태가 아니라, 한반도 내외의 이해상충하는 세력간의 현실적 공간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통일논의에 있어서 특정한 선협적 전제나 비타협성은 통일논의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도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국민들의 자유로운 통일논의와 통일정책 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정부의 전향적·개방적 정책변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주화’로 집약되는 체제의 본질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북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 참 고 문 헌

#### 장신철 외

1988, 「80년대 학생운동사 : 사상이론과 조직노선을 중심으로」 서울 : 형성사.  
김영환

1987, 「항소이유서」.  
김진우

1988, “통일운동의 대중적 활성화를 위한 방법론,” 서울지역교지 편집위원회 엮음,  
『백두에서 한라까지 : 분단현실과 조국통일운동』. 서울 : 돌베개.

#### 김학우

1989, “민족분단 해소를 위한 선결과제,” 「민족통일」, 1, 2월호.  
이광영

1988. 7, “학생 운동권의 통일논의의 전개과정,” 「기독교사상」, 제32권, 제 7 호.  
최문성

1987, “한국학생운동연구 : 그 사상투쟁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  
정치의 현대적 조명」.